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전… 정치권 공방 과열

정진욱 의원 “옛 보훈병원 부지” vs 남구 “송암공원”

정준호, 옛 광주교도소·전진숙, 중외공원 각각 주장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본궐도에 오른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간 유치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남구와 북구가 유치에 적극적이면 서도, 각 자치구 내 후보지를 놓고는 정치 권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사업은 연면적 약 1만4000여㎡ 규

모에 총사업비는 1000억여원을 투입,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8일 분관 건립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용역기관은 앞으로 9개월 동안 건립 부지 선정을 비롯해 건립 규모 및 필요 시설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부지 검토 대상은 전국이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이래 줄곧 국회도서관 광

주분관 건립을 공언한 만큼, 사실상 ‘광주 내 입지 경쟁’으로 좁혀지면서 남구와 북구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먼저 남구는 옛 보훈병원과 송암공원을 놓고 지역구 정진욱 의원과 남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 의원은 옛 보훈병원을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후보지로 제시하고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 수요, 보훈병원으로 사용됐던 역사성 등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반면, 남구는 옛 보훈병원 부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송암근린공원과 노대동 일대 등 대체 후보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남구가 추진하려는 송암공원의 한도 면적 1만5010㎡는 법상 가능하지만, 원형보전지라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례를 봤을 때 환경영양평가 통과도 어렵다”며 “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도 시기상 불가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역구 전진숙, 정준호 국회의원 이 서로 다른 후보지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나섰다.

정준호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후보지로 주장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연결되는 역사성을 강점으로 국회도서관을 민주·인권 관련 지식과 기록을 보존하

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재정경제부 부지인 만큼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존재하게 된다.

전진숙 의원은 문화 인프라가 집약된 중외공원 일대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중외공원 일원에는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에 술의전당 등이 밀집해 있는 만큼 국회도서관을 유치해 광주의 대표 문화·예술·지식정보 거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북구는 후보지로 언급되는 옛 광

주교도소 부지와 중외공원 일원 등 2곳을 대상으로 접근성, 주변 시설과 연계성, 부지 확보 가능성 및 행정절차 등을 자체 검토 하고 있다.

이처럼 후보지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서 집안싸움이 유치의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최종 부지나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공방이나 과열 양상이 먼저 불거져서 좋을 게 없다”며 “국회도서관 분관의 광주 유치를 위해 각 자치구마다 뜻을 하나로 모아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복 입고 총장로 나들이’ ‘총장로에서 한복을 짓고, 입고, 걷다’를 주제로 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총장로 일원에서 열린 레트로 ‘한복 감성투어’에 참여한 임택 동구청장과 참가자들이 형형색색의 한복을 자랑하고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동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7일~11일(5일간) 총장축제 기간에 맞춰 이어질 예정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44개 기관·공기업 ‘국감 검증대’ 오른다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통합 후 첫 수감

특별시·전남대·광주공항공 등서 현장감사도

국회는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전남광주 44개 기관 및 공기업은 8일 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까지 15일간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지난 7월 헌정사상 초유의 광역행정통합의 달을 올린 후 처음 맞이하는 국감이다.

통합체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비롯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군공항 이전, 공기업 통합, 전남국립의대 설립,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한 농업에 대책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첫 주자는 광주지방기상청과 전남대학교병원이다. 8일 국회에서 각각 기후에너지 전환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12일에는 한국전력공사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로부터, 여수

와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각각 감사를 받는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감사가 열린다.

13일에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복지위 회의실에서 감사를 받는다.

14일에는 빛가람혁신도시에 분사를 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회에서 농해수위 감사에 응한다.

15일에는 국방위가 오전에 광주공항공을 찾아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오후에는 장성 상무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날 기후노동위는 국회에서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영산강홍수통제소, 국립

호남권생물자원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16일에는 국방위가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오전에 방산업체인 기아의 광주공장을, 오후에는 육군제31보병사단이 근무하는 무안 해안초소와 해군제3함대사령부가 있는 목포를 각각 방문한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데이팅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광주지방공공노동청은 국회에서 기후노동위 감사에 응한다.

19일에는 빛가람혁신도시에 분사를 둔 한전과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전력거래소가 국회에서 기후노동위 감사를 받는다.

농해수위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여수광양을 찾아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오후에는 양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등과의 통합 방침이 발표돼 개별 공기업으로는 마지막 감사가 될 전망이다.

20일에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

원, 광주가정법원과 광주회생법원이 오전에 광주교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오후에 광주고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광주고검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날 광주과학기술원과 국립광주과학관은 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감사를 받는다.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서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통합한 이후 처음 받는 국감이다.

21일에는 전남대학교가 학교를 방문하는 교육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후 첫 국감을 광주청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받는다. 행안위는 특별시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광주청사에서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불러 감사를 벌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 첫 정무부시장 후보 본격 검증

오늘 백승주·윤난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정무부시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6일부터 7일까지 백승주·윤난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백승주·윤난실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인사청문회 일정과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각 위원회는 인사청문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통합시정에 대한 비전과 정책역량, 공직관과 자질, 도덕성과 준법성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가 정무부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백승주 후보자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예산·자치분권·조직·관광·건설·에너지산업·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를, 윤난실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민주권·청년·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직무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단, 이번 인사청문의 강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정무부시장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인 데다 시민추천 공모 당시 지방직 부시



백승주

윤난실

장의 분장사무와 공모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집행부가 조직개편으로 부시장 직제를 손질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역할과 배치가 달라진 만큼 공모 당시와 다른 직위에 제공모 없이 같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한 절차의 적절성과 변경된 직무수행할 전문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반대 가류도 청문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달 18일 조직개편안이 재석 89명 중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과반을 넘겨 통과했다.

당시 조직개편에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이 청문특위에 포함되면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한편, 의회는 청문회 종료 후 검증 결과를 담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정기인사 단행

승진 363명 의결…조직 안정·성과·전문성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출범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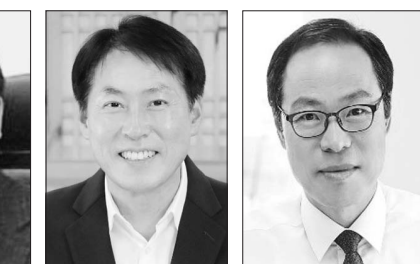
통합에 따른 조직 확대와 개편에 맞춰 간부 보직을 재배치하고, 5급 이하 363명의 승진을 의결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112명, 6급 115명, 7급 102명, 8급 34명 등 모두 363명의 승진을 결정했다.

부단체장 등 후속 인사는 6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급 보직에서는 이상배 이사관을 기후환경본부장, 김기홍 이사관을 균형발전실장, 강효석 이사관을 성장투자유치본부장에 각각 배치했다.

3급에서는 전은옥 부이사관이 반도체 산업지원정책관, 김기숙 부이사관이 정책기획국장, 오영걸 부이사관이 안전정책국장을 맡는 등 31명이 보직을 받았다. 4급에서는 고경희 서기관을 시정상황실장에 임명하는 등 147명의 보직 인사를



이상배

김기홍

강효석

단행했다.

시는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 확대와 개편으로 승진 요인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행정·기술 등 전 직렬에 승진 기회를 고르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간부 보직 배치에는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주요 현안 해결 과정에서의 성과와 전문성, 업무 역량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행배 시장은 “행정통합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성과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성과와 전문성이 인사에 제대로 반영되는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대 항고 검토…후보 선정 공방도 계속

▶1면에서 정부는 국정과제에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포함하고, 2030년 신설 의대 정원으로 제시한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선정했다. 통합시가 순천대를 추천한 것은 이 정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대학 선정과 정부의 최종 승인·정원 배정은 별개 단계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남은 절차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순천시는 “법원 결정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다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통합시·순천대와 공조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원 배정과 신설 승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대학 추천 이후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순천 측은 정부 심사에 대응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됐다. 다만 의대 설립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도 남았다. 의대 후보 선정에서 탈락한 서남권의 의료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지가 향후 의료체계 구축 과정의 주요 과제다.

손훈보 순천시장은 정부와 통합시가 서남권에 대학병원급 거점 의료시설과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신설 추진과 별도로 서남권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와 통합시의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목포대는 이번 각하 결정에도 후보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

이다. 대학 관계자는 “별도의 보안소송이 있는 만큼 충실히 대응하고,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후보대학 선정 절차의 부당함을 교육부에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의 법적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목포대가 제기한 부지 확보와 평가 과정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 정부 후속 절차에 대한 통합시와 순천 측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보안소송은 별도로 남아 있어, 교육부 심사와 후보 선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